

3선개헌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부산상고 57 동기회

80
성상의 전통

1969년 8월 7일은 흔히 3선개헌안이라고 불리는 제6차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이다. 지난 2000년 1월 공포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은 이 날을 기점으로 삼아 그 이후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날이 보상심의 대상이 되는 분기점이 된 데는 법 제정 당시 정치적인 타협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4·19혁명과 같이 다른 법에 의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선개헌 이전의 수많은 민주화운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규정에 대한 변경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 조만간 바뀔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화운동을 최소한으로 국한시키려는 입김이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1969년 3선개헌안이 날치기 통과한 직후 반대시위를 벌였던 부산상고의 학생회 간부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명예회복 신청을 낸 끝에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청춘의 한때나마 바친 분들에게 한낱 종이쪽에 불과한 인정서는 너무도 작은 보답일 것이다. 법이 개정되어 당시 내려졌던 학사징계 등에 대한 회복조치도 따르게 되었지만 당시 시위 주동 혐의로 퇴학당해 동기들보다 1년 늦게 졸업해야 했던 학생회장 신용찬(부산동고 교사) 씨의 세월을 보상해주지는 못 할 것이다. 30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시위를 주동했던 분들의 기억은 너무나 또렷했다. 큰 자부심만큼이나 가슴 깊은 각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큰 자부심만큼 가슴 깊은 각인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된 후 민주공화당은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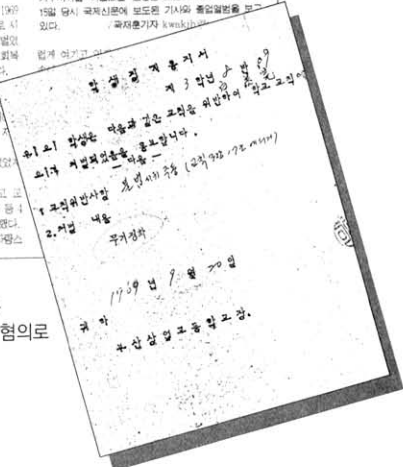
'3선개헌 반대' 숨은역사 찾기

부산상고 57회 동기회
시위 주동자 명예회복 등
부산민주기법사임회에 요청



고교생이 처음으로 학생회 간부선거의 3선 개헌에 맞서 가두 시위를 벌였던 부산상고 57회 동기생들이 19년 만에 돌아온 진상 밝히기에 나섰다.
부산상고 57회 동기회(회장 이광호)는 지난 1989년 8월 19일 오후 3시에 당시 고교 3학년의 신분으로 시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을 반대하는 데모를 벌인 숨은 역사를 재조명하고 주동자 명의 명예회복 협회 등을 19일 부산민주기법사임회에 요청했다.
당시 부산상고 진교생 1선대결은 부산 중구 현대극장 전과 재일권원 부산직공에 강제징용된 것이다. 군함을 거쳐, 3선개헌과 체재권은 반대. 권익편을 남기지 않음. 남포동 일대에서 가두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고 이 요청은 밝혔다.
3선개헌에 반대는 대우상과 가두시위는 중증 있었. 이 때문에 시위를 주도했던 신용찬(부산동고 고사) 학생회장이 체포되고, 경기도 대곡시 노원동 씨 등 1명이 투기장화를 이 회장을 명예회복을 담당한다. 이 회장은 '행위에 맞서 시위를 주도한 것을 자랑스

- ▲ 57 동기회 관련 신문기사
- ▶ 3선개헌 반대 시위 주동 혐의로 받은 학사징계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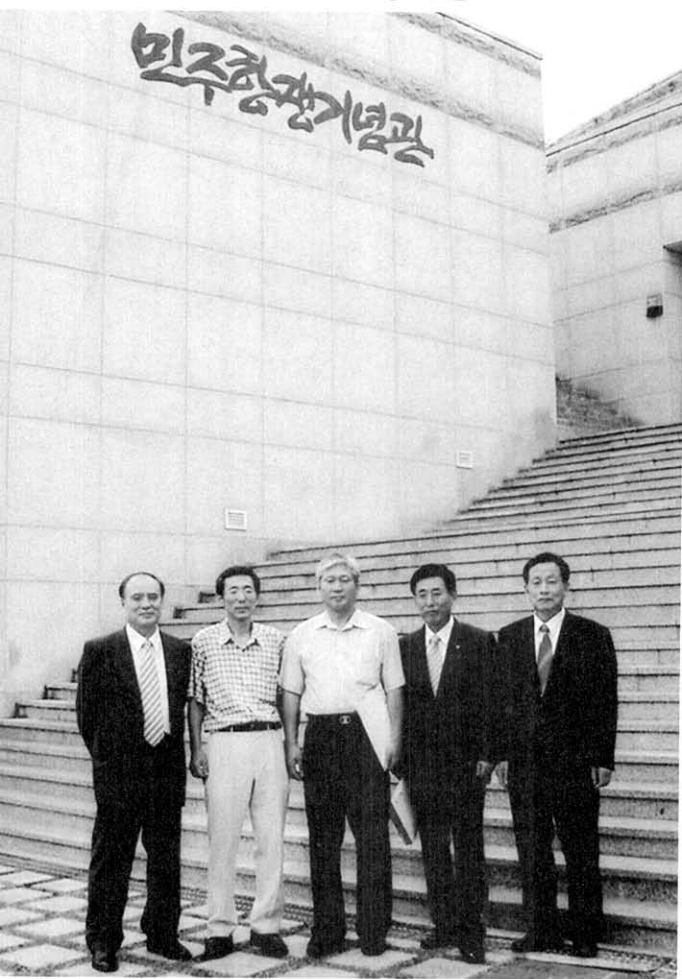
나 1969년 봄까지만 해도 '개헌불가'를 천명하며 침묵하던 박정희는 여름에 접어들면서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헌 가능'으로 번복했다가 마침내 국회 날치기를 통해 3선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부정과 탈법으로 국민투표를 강행해 장기집권의 길을 텃다.

1969년 8월 7일 3선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야당의원들은 격렬히 반대하면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정상적인 표결이 불가능해진 민주공화당은 9월 14일 새벽 2시 30분 야당이 점거한 본회의장을 피해 국회 제3별관 특별회의실

에서 불과 6분 만에 3선 개헌안을 의결하였다. 그 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개정 헌법에 의거,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국회 날치기가 이뤄진 그날 야당 의원들은 환하게 불이 밝혀진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칠혹 같은 어둠으로 쌓인 길 건너편 제3별관에는 개헌을 찬성하는 민주공화당, 정우회 및 무소속 의원들이 삼삼오오 도둑고양이 걸음으로 모여들었다. 122명

3선개헌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57 동기회원들



의 의원들은 개헌안에 이어 국민투표법안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 때가 새벽 2시 54분. 엄청난 일이 순식간에 끝나자, 이들은 “빨리 나가라”는 당 간부의 독촉소리와 함께 계단을 밀려 내려갔다. 입구에서 사진기자의 플래시가 터지자 얼굴을 손으로 가리는가 하면 벽을 향해 몸 둘 바를 모르는 몸짓으로 도망치듯 후문을 빠져나갔다. (『해방 40년의 재인식』 II 중에서, 돌베개, 1986)

3선 개헌이 있기 2년 전인 1967년 6월 8일 박정희는 윤보선을 누르고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때에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에서도 대부분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6·8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고교 중 동래고가 16일 가장 먼저 시위를 시작했고, 부산상고 역시 다음 날인 17일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다.

부산상고학생 약 5백 명은 이날 상오 8시 45분 거리로 나와 “4·19가 울고 있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해화여고 앞을 거쳐 범천동 로터리에서 연좌 데모를 벌이고 삼화고무 앞까지 진출, 경찰과 옥신각신하다가 선두의 20여 명이 연행되었다. 이에 흥분한 학생들은 부산진역까지 뛰어가 다시 경찰과 대치, 투석전까지 벌였다. 이 데모대는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해화여고 근처에서 부산공고 학생 5백 명과 합류, 경찰의 최루탄 공세로 해산되었다. (부산민주운동사 중에서, 부산민주공원)

6·8 대선은 있은 뒤 2년 지나고 박정권이 3선개헌을 획책한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정국은 또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69년 1월 8일 공화당에서 3선개헌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의 반대투쟁이 전개되었다. 이후 4개월 동안 55개 대학 37개 고교의 15만 7천여 명이 참가한 시위가 전개되었지만 박정권의 탄압에 의해 무산되었다. 한편 박정권은 69년 1월 9일 일곱 개 시의 남녘고

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69년 당시 고교 3학년들은 3선개헌을 시도하는 정권이 학내 병영화를 시도하기 위해 학원 내에서 처음으로 군사훈련이 시작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처음으로 시작된 교련 수업은 현역장교가 선생으로 부임했는데 마치 신병 교육하듯 강압적 분위기였습니다.” 이택희(57 동기회 회장) 씨의 말에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신용찬 회장을 중심으로 한 부산상고 학생회 간부들은 처음 부산시내 전 고교생들과 연대하여 3선개헌 반대시위를 하기로 했었지만 경찰 측에 알려지는 바람에 결국 단독 시위를 결행하기로 결심하였다. 마침 현대극장에서 단체 영화 관람을 하게 되어 이를 기회로 삼기로 했다. 69년 9월 16일 오후 3시경 부산상고 학생회 간부들은 극장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위를 시작했다. 신 회장이 쓰레기통에 올라서서 직접 준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3선개헌 반대”, “중앙정보부 해체”, “교련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나갔다. 5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시위대열은 이후 동양방송과 시청 앞을 지나 남포동 파출소까지 진출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시청 앞 광장에 집결해 연좌데모에 들어갔다.

부산상고 단독 시위 결행

“마침 박대통령이 수해피해상황 시찰차 부산에 내려와 해운대에 묵을 예정이어서 시내에 경찰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시청 앞까지 진출할 수 있었죠.” 당시 시위 주동자로 지목되어



69년 당시 고교 3학년들은 3선개헌을 시도하는 정권이 학내 병영화를 시도하기 위해 학원 내에서 처음으로 군사훈련이 시작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당시 졸업앨범에 실린 교련 장면)

무기정학을 당했던 백태완(경남은행 창원지점장) 씨의 말이다.

요즘도 같이 모이면 그 때의 기억들을 맞춰보느라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부산상고 57회 동기들은 당시의 열정이 이후 삶에서도 항상 제자리를 찾게 하는 힘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부산상고뿐만이 아니라 3선개헌이 이루어지기 전후에 부산 지역에서도 많은 시위가 있었어요. 같은 열정으로 그 전에 시위를 벌였던 동래고 친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있는데 법 적용 대상이 69년 8월 7일 이후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 분들을 빼놓고 있어요.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모든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신 회장의 말처럼 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 모두의 자부심 또한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 길이 곧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종철〉